

□ 정부시책 □

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

○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여 기업활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실무종합협의회에서 일괄 검토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이를 위해 공업배치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험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 최소한의 필요서류(사업계획서등 3~4종)만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해 승인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하는 <선승인 후서류 제출 원칙>의 법제화(공업배치법에 명시)
 - 관할관청의 「실무종합협의회」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처리하고 당해기관 내부의 서류에 의한 별도의 협의절차는 생략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 기업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입지에 관한 토지·건축·환경 등 58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공업배치법에서는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개 법률 40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를 일괄 의제처리 받기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146종의 구비서류들을 미리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의제처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선승인제도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등 승인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승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배치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 또한,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시 구비서류 146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서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폐지를 요청할 방침임.

○ 일선 시·군·구 내부에서의 협의과정에서도 일일이 문서를 생산·유통시켜 협의한 후 승인 결정을 함으로써 처리에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선승인제도에 의하면 공장설립 승인업무를 시·군·구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종합·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빠른 시간내에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문서의 생산·유통에 의한 협의는 생략하도록 함.

- 시험적 실시과정에서도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자체처리가 가능한 인·허가를 대상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검토·처리토록 하고, 기관내부에서의 불필요한 문서처리등을 생략하여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규제완화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험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법령 개정예 반영할 계획임.

- 이와 아울러, 시·군·구에서 다른 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의 처리 기준을 공업배치법에 의해 제정·고시하여 이 기준에만 따르면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협의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설립승인을 얻는데 2~3개월씩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적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구비서류 간소화와 승인 후 제출로 기업인들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기술하부구조 확충 996억 支援

산업자원부는 올해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등 7개분야 65개 사업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비 99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개최, '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 및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올해 기술하부구조 확충과 관련해 기술인력양성에 200억원, 기간정보 확산 59억원,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605억원, 국제기술협력 9억원, 산업표준화 33억원, 산업기술지원 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테크노파크 조성에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70억원, 구로공단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환경

개선 사업에 6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기술발전심의회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물의를 빚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별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 부정

경쟁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을 논의했다.

자본재 표준규격 개발추진

올해 자본재 표준규격 140건이 새로 제정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지난 '95년 이후 추진해 온 자본재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98년도 자본재표준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기술품질원은 지난 2년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표준규격 개발 노하우가 축적돼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14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규격 개발대상 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기술이 안정되고 수급상 계열관계가 있는 부품·소재의 통일·단순화를 통해 기업간 규격의 공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ABS브레이크 메인릴레이 등 공용화 과제 52개가 선정됐다.

또 수출촉진 품목과 국제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산업용 로봇 등 62개 과제를 ISO, IEC 등 국

제규격과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기기용 스테핑모터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부품·소재중 국제규격 또는 국내규격이 없고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 26개 과제를 선정, 기술개발 사업과 병행해 새로운 표준규격으로 개발키로 했다.

기술품질원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표준규격 개발 사업은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협회 등과 관련 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한편 앞으로 개발되는 표준규격은 KS규격 또는 단체표준 등으로 제정될 예정인데 특히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에서는 시제품제작이나 금형·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98 상반기 국산신기술 인정(KT마크) 예정 기술

○ 전기전자분야

회 사 명	인 정 기 술 명	인정기간
건아기전(주)	전용차선 위반감시용 영상검지기술	2
국제콘트롤(주)	통신과 전원의 중첩방식을 이용한 2선식 공조제어 시스템	2
대우중공업(주)	전동차용 Frameless AC 견인전동기 제작기술	2
동방전기공업(주)	변압기 부하전류 무선측정장치	3
삼성전기(주)	Nd-Yag Laser를 이용한 연속적층회로 기판 제조기술	3
(주)삼성항공산업	일안리플렉스 카메라의 자동노출 메카니즘과 정밀제어 기술	3
삼창기업(주)	원자력발전소용 전자회로기판 고장판단기술	3
샬롬엔지니어링(주)	철도차량 주행중 차량진동량 추출을 응용한 차륜 찰상 검출 장치	2
쓰리알(주)	움직임 감지전용 Chip을 이용한 Video Motion Detector	3
엘지전자(주)	에어컨용 광촉매 플라즈마 공기정화필터	2
인텍전기전자(주)	자동차단기 구동용 Magnetic Actuator	2
한국정보통신(주)	IC카드를 사용한 전자지갑식 개방형 통합선불카드 시스템	2
현대중공업(주)	IGBT형 190kVA급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2